

‘부자 감세’와 소득 불평등 현황 점검 : 2009년 감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

2010.1.4 | 이상동_새사연 경제연구센터장 | sdlee@saesayon.org

목 차

요약

1. 문제제기
2. 분석 방법과 글의 구성
3. 이명박 정부 감세 및 재정지출 현황
4.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재분배 구조
5. 최근 소득 불평등 추이 분석
6. 소득 분위별 조세 부담률의 변화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http://saesayon.org>

요약

새해가 밝았다. 2010년 한국경제의 최대 복병은 가계 부채가 될 전망이다. 지난 해 경제위기를 돌파해 가는 과정에서 금융 부문의 부실을 막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방어하며 경기회복을 이끌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사용되었으나 가계 경제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 브리핑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감세 정책의 효과를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다. 특히 감세가 가계의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켰음을 확인하게 된다.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배경: 확장적 재정정책, 가계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사용

- 재정정책의 고유한 임무 세 가지 : 자원 배분, 경제 안정 그리고 소득 재분배
-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재정정책의 사용이 자원 배분과 소득 재분배를 왜곡시킬 가능성
- 소득 재분배의 악화는 장기적인 경제 안정에 악영향. 소득 재분배는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

○ 감세 정책, 각 소득 분위에서의 소비성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 확산
- 감세의 효과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발생

○ 연구 내용 1. 2009년 상반기까지의 소득 재분배 추이 확인

- 가장 최근의 경기 고점인 2008년 1월 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의 소득 재분배 현황 파악.
- 시장 소득의 감소와 소득 불평등의 악화가 주의되는 시기.

○ 연구 내용 2. 분위별 조세 부담률 확인

- 정부의 재정정책은 공적이전과 조세, 그리고 공공재 배분과 현물급여 등의 방식으로 소득 재분배에 기여. 한국의 경제구조에서는 특히 조세의 역할이 가장 큼
- 각 분위별 조세 부담률의 변화를 통해 소득 재분배 악화 내용을 확인

○ 연구 결과 1. 정부의 확대재정정책 현황

- 2008년 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은 총 약 49조원 규모. (당해년 가격 단순 합산).

- 감세 규모는 집계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정부의 세수 감소를 기준년 방식으로 집계할 경우 2009년에 12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세수 감소는 주로 직접세 부문에서 발생. 직접세는 전체의 82.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 직접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항목이므로 소득 불평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연구 결과 2.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재분배 구조

- 소득 재분배란 ‘시장 소득’에 의한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활동. 일반적으로 시장 소득의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차이, 즉 지니계수 개선도가 클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평가됨.
-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재분배 구조는 ‘민간 이전’과 ‘직접세’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공적 이전’과 ‘간접세’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이 때문에 OECD 국가 가운데 소득 재분배 효과(즉,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최하위를 기록

○ 연구 결과 3. 최근 소득 불평등 추이 분석

- 지니계수 개선도를 확인해 본 결과 2009년 상반기에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가처분소득 형성 단계에서의 악화가 두드러짐. 2009년 상반기에 평균 소득 자체가 하락하는 가운데 이전소득, 비소비지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하락하는 바람에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이 전년 대비 더욱 악화됨
- 10분위 배율에서도 지니계수 개선도와 동일한 맥락이 확인됨. 결국 소득 재분배가 악화되었음이 확인됨.

○ 연구 결과 4. 소득 분위별 조세 부담률 악화

- 앞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도가 2009년 상반기 들어 악화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조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의 감소 때문임을 확인함
- 먼저 최상위 시장소득 분위인 10분위의 경우 2008년 1분기에 54.6%를 점했던 조세부담률이 2009년 2분기 현재 40.1%까지 무려 14.6%p나 하락함.
- 8분위 이상의 최상위 소득 분위가 조세 부담률이 모두 하락. 그러나 7분위 이하의 모든 하위 소득 계층의 조세 부담률은 증가. 즉, 상위 30%의 조세 부담률은 하락하고 하위 70%의 조세 부담률은 상승한 것임.
- 상승률 기준으로는 하위 3분위 계층의 부담이 가장 커졌고, 총 액수 기준으로는

6분위 계층의 부담이 가장 커진 것으로 파악됨

○ 결론 및 시사점

- 감세 정책으로 인해 소득 재분배가 즉각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됨. 감세는 장기에 걸쳐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정부의 주장이 있으나 이를 현실점에서 확인하기는 불가능.
- 이번 감세 정책은 한국경제 소득 재분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접세에 대한 감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단기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 현재의 감세 정책은 상위 소득자일수록 수혜가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됨. 하위 70%의 조세 부담률은 오히려 증가.
- 정부가 2010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함.
- 특히 감세 정책의 경우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음.

1. 문제제기

경제위기에 직면하자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가장 강력한 위기탈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생산과 투자, 그리고 소비 등 전 부문이 동반 침체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유일한 유효수요 창출자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이 정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재정정책의 방향은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 재정정책의 유효성과 적절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재정정책의 고유한 임무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정정책의 고유한 임무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자원 배분, 경제 안정 그리고 소득 재분배의 역할이 그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단기적인 경제 안정에 기여하지만 자원 배분과 소득 재분배를 왜곡시킬 경우 장기적인 경제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소득 재분배의 강화는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개인의 소득은 각자가 소유하는 자원의 가격과 수량, 즉 생산요소로부터의 수익률과 생산요소의 소유여부로부터 결정된다. 각자가 소유하는 자원의 종류나 양 그리고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에는 필연적으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소득 불평등에 적극 개입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화를 실현하는 것을 임무로 하게 된다.

현재 감세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감세 정책의 경우 각 소득 분위에서의 소비성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됨으로써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득 재분배를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감세의 효과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여기서 비롯된다.

2. 분석 방법과 글의 구성

이 글은 경제침체가 최악의 시기에 이르렀던 2009년 상반기의 소득 재분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한 가장 최근의 경기 고점은 2008년 1월이다. 2008년 1분기 이후 주요한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과 가계

의 소득 재분배 현황을 확인한다. 이 시기는 세계경제의 위기 국면으로써 시장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득 불평등의 악화가 주의되는 시기이다.

현 정부는 사상 최대의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조세정책이 소득 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최근 가계의 소득 재분배 현황을 2008년 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 가계 소득의 변동과 불평등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소득 재분배의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공적이전과 조세, 그리고 공공재 배분과 현물 급여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특히 조세에 초점을 맞추어 분위별 조세 부담률을 확인한다.

이 글의 분석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2009년 상반기에 소득 불평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최근 정부의 재정정책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정책적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이명박 정부 감세 및 재정지출 현황

재정정책(fiscal policy)라 함은 크게 정부지출(재정지출) 정책과 조세 정책으로 구분된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경기하강기에 확립된다. 재정정책이 경기하강기에 총수요 또는 가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경기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이 총수요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감세로 대표되는 조세정책의 경우에는 총공급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¹⁾ 예컨대, 소득세율의 인하는 가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가치분소득은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게 됨을 의미한다. 법인세율의 인하는 법인세지불후의 순법인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소득이 증가하고,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제고되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이 주류경제학의 일반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다.²⁾

2008년 이후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 보자. 2008년도에 ‘추경예산안’과 ‘유가환급금 등 세제지원’을 통해 각각 4.6조원, 4.4조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의 경우는 2008년에 편

1) 경제학 학파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케인즈 학파의 경우에는 감세가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반면 공급주의 학파는 감세를 통해 총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있다. 일반적으로 감세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공급주의 학파의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세한 설명은 김기성 외(2004) 참조

성한 ‘수정예산안’으로 인해 10조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2009년 세제개편을 통한 감세안으로 10.3조원, 2009년 공기업 투자계획으로 1조원, 2009년 추가 감세로 0.9조원이 확대되었다.

표 1. 최근의 확대재정정책 현황

(단위: 조원)

정책추진 시점	내역	금액
2008	-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	4.6
	- 2008년 유가환급금 등 세제지원	4.4
2009	- 2009년 수정예산안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10
	- 2009년 감세안	10.3
	- 2009년 공기업 투자	1
	- 2009년 추가 감세	0.9
	-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	17.7

자료: 박승준(2009),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위의 총괄표에서 나타난 수치 가운데 감세 규모에 대해서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추정방식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정에 따라 수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정방식은 행정부가 사용하는 전년대비 방식이 세수효과를 과소추정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국회가 사용하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³⁾. 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채택할 경우 2008년과 2009년에 감세규모는 각각 6조 2,030 억원과 12조 102억 원이 되며 이는 위 표에서 제시한 감세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아래 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세목별 감세규모를 기준연도 대비 방식에 따라 추계한 것이다. 2009년의 세수 감소규모는 직접세에 해당하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가 각각 4조 2,030억 원, 3조 8,400억 원, 130억 원이 감소하고 종합부동산세가 1조 8,310억 원 감소해서 총 9조 8,870억 원이 감소하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증권거래세가 각각 7,392억 원, 7,956억 원, 280억 원이고 주세가 30억 원으로 총 1조 5,658 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세의 감소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목적세와 관세를 합해 5,574억 원의 세수가 감소함으로써 총 12조 102억 원이 2009년에 세수 감소효과로 나타날 것으

3) 자세한 설명은 이영환, 신영임(2009) 참조

로 추정되었다. 감세가 직접세에 집중됨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소득 재분배 구조는 직접세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세목별 감세규모 추정

(단위: 억원)

		2008	2009
총합계		-62,030	-120,102
직접 세	소계	-39,570	-98,870
	소득세	-35,820	-42,030
	법인세	0	-38,400
	상속증여세	0	-130
	종합부동산 세	-3,750	-18,310
	간접 세	소계	-3,340
	부가가치세	-1,250	-7,392
	개별소비세	-2,080	-7,956
	증권거래세	0	-280
	주세	-10	-30
교통·에너지·환경세		-10,190	-4,437
관세		-6,640	480
교육세		-1,590	-317
농특세		-700	-1,300

주: 기준연도 대비방식으로 추정. 전년도 대비방식의 행정부 공식 발표와는 차이 발생

자료: 이영환, 신영임(2009),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에서 인용

4.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재분배 구조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재분배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보기로 하자. 소득 재분배란 경제적 활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획득하는 1차 소득, 곧 시장소득(market income) 이후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시장소득은 노동과 자본 등 원초적 투입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의 합으로 구해진다.

소득 재분배는 시장소득에 의한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소득 재분배를 평가하는 가장 대표

적인 방법은 시장 소득의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의 지니계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니계수가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므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차이는 소득 재분배에 의해 불평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 대신에 민간소득(private income), 총소득(gross income), 세후소득(post-tax income) 등의 지니계수를 시장소득의 지니계수와 비교하기도 한다. 각각의 소득과 시장소득의 차이는 여러 단계의 소득 재분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장소득과 민간소득의 차이는 민간이전소득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소득의 지니계수와 민간소득의 지니계수 차이로부터 민간이전소득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소득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시장소득 = 노동과 자본을 통해 시장에서 획득한 소득

민간소득 = 시장소득 + 민간이전소득

총소득 = 민간소득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사회보장 수혜)

가처분소득 = 총소득 +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 기여금)

세후소득 = 가처분 소득 + 간접세(소비세)

민간소득(private income)은 시장소득에 타 가구 등으로부터 경상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 교육비 등 민간이전소득을 추가한 것이다. 여기에 공적 현금급여(cash benefits)를 합산하면 총소득(gross income)이 된다. 여기에는 4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장애인수당 등이 포함된다. 총소득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차감하면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을 얻게 된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세(간접세)를 차감한 소득을 세후소득(post-tax income)으로 정의한다.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주세, 담배소비세, 교육세(각종 소비세에 대한 surtax분)를 포괄한다. 참고로 세후소득에 현물급여(in-kind benefits)를 추가하여 최종소득(final income)을 정의하기도 한다. 현물급여의 유형은 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 건강보험, 교육, 보육, 주택 등이 있다.

시장소득으로부터 시작되어 세후소득에까지 이르는 각 단계에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 2007년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총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변화되는 단계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참조)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총소득의 지니계수보다 6.45%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직접세를 통한 소

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재산세 등에서 소득 상승에 따라 누진성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간접세의 효과를 보면, 간접세는 소득 불평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분소득과 세후소득 사이의 지니계수 변화가 0.58%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간접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세이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 소비성향이 높아진다. 한편 공적이전에 의한 소득 재분배효과는 민간이전에 의한 소득 재분배효과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소득과 민간소득 사이에 존재하는 민간이전소득 효과는 소득 불평등(지니계수)을 4.55% 감소시키지만, 민간소득과 총소득 사이에 존재하는 공적이전소득 효과는 소득 불평등(지니계수)을 2.79%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공적영역인 사회안전망의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영역인 부모 또는 가족으로부터 보호가 강하다는 사실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그림 1. 소득 재분배에 의한 지니계수의 변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의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 (아래 표 참조) 이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OECD 평균인 0.31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소득 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 시장소득의 불평등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소득의 불평

등도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0.34를 기록해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의미하는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0.03에 그쳐 OECD 국가 평균인 0.14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비교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표 3. OECD 국가 소득재분배 효과

순위	국가	시장소득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개선효과
1	벨기에	0.49	0.27	0.22
2	독일	0.51	0.30	0.21
2	이탈리아	0.56	0.35	0.21
4	체코	0.47	0.27	0.20
4	프랑스	0.48	0.28	0.20
4	폴란드	0.57	0.37	0.20
4	스웨덴	0.43	0.23	0.20
8	덴마크	0.42	0.23	0.19
8	룩셈부르크	0.45	0.26	0.19
8	슬로바키아	0.46	0.27	0.19
11	오스트리아	0.43	0.27	0.16
11	포르투갈	0.54	0.38	0.16
11	호주	0.46	0.30	0.16
14	네덜란드	0.42	0.27	0.15
14	노르웨이	0.43	0.28	0.15
16	뉴질랜드	0.47	0.34	0.13
17	캐나다	0.44	0.32	0.12
17	핀란드	0.39	0.27	0.12
17	일본	0.44	0.32	0.12
17	영국	0.46	0.34	0.12
21	아이슬란드	0.37	0.28	0.09
21	아일랜드	0.42	0.33	0.09
23	미국	0.46	0.38	0.08
24	스위스	0.35	0.28	0.07
25	한국	0.34	0.31	0.03
	OECD 25개국 평균	0.45	0.31	0.14

*출처 : OECD Statistic(2009)

*2000년대 중반 기준, 한국은 2006년 자료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이전소득과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평가하는 지니계수 개선도의 경우 2006년 현재 6.98%로써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의 각각 15.2%(2005년), 34.6%(2005/06회계연

도), 25.3%(2005년), 18.6%(2004년), 26.0%(2005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지니계수 개선도에 대한 설명은 후술). 또한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구조와의 주요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또는 직접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공적연금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현금급여)를 통한 재정지출(공적이전소득)의 효과보다 크지만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우리와 정반대로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직접세를 통한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4.31%로 캐나다의 8.9%보다는 현저히 낮지만 미국 5.9%, 영국 5.8%, 뉴질랜드 4.7%와 비교해볼 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우리나라가 2.67%에 불과하지만 상기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9~29% 정도로 우리보다 크게 높다. 공적이전소득과 관련하여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현격한 차이로 작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복지제도의 범위가 선진국보다 좁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령화의 진전속도 차이, 노인인구비의 차이,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에 의한 소득수준의 차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지금까지 다른 국가와의 비교 수치는 성명재, 박기백(2008)에서 인용)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 재분배는 직접세와 민간이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적이전을 통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오히려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세와 공적이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성명재, 박기백(2008)은 직접세 가운데에서도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고, 현물급여 중에서는 교육급여가 가장 효과가 높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세를 강화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공공 교육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5. 최근 소득 불평등 추이 분석

1) 분석 방법

최근 소득 불평등 추이를 확인하고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의 변화를 분기별로 구하였다. 이 때 지니계수 G 는 소득 순위별 누적 소득으로 얻어지는 로렌즈 곡선에서 구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관계식을 갖는다.

$$G = \left[\frac{2}{\mu N^2} \sum k I_k \right] - \frac{N+1}{N}$$

where, 소득함수 $I_k(\mu, N)$, 평균 μ

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는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이다. 분기별 시장소득과 총소득, 그리고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추이를 확인하고 상호 비교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시장소득과 총소득 사이의 비교에서 이전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추정할 수 있고 총소득과 가처분소득 사이의 비교에서 (준)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가계의 소득 불평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 값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아니되고 ‘동등화 소득값’을 적용해야 한다. 동등화 지수(equivalence coefficient)는 시장소득이 일반적으로 개인에 귀착되는 데 반해 소득의 불평등도는 가계 단위로 측정되는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다. 동등화 지수는 가구원의 구성을 고려해서 정해지는데 이 글에서는 가장 간단한 동등화 지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즉, 동등화 소득값은 가구 소득에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나누어서 구하였다.⁴⁾

가계 동향조사는 표본조사이므로 전국 가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표본 데이터에 대해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다. 동등화 시장소득에 따라 가구의 소득 순위를 결정하고 여기에 가중치를 두어 전국 가구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이 글에서는 가계 동향조사가 1인 가구를 대표하는 데 있어 대표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인 이상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 글의 지니계수 분석의 한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니계수는 가구 소득의 계절적 변동 요인 때문에 연간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글은 분기별 지니계수를 구하고 있어 다른 연구에서 구한 지니계수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지니계수를 구한 이유는 재정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가장 최근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제 5장에서의 분석은 2009년 2분기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한다.

4) 가구원 수에 따른 가계 소득의 조정은 경제활동 가능 가구원과 부양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I^* = I(A + aC)^b$. 여기서 I 는 가구의 소득을 나타내며 A, C 는 각각 경제활동 가능 가구원과 부양 가구원이고 a 는 부양 가구원 조정을 위한 계수, b 는 가중 지수를 나타낸다. 이 글에서는 a 를 1, b 를 0.5로 하는 가장 간단한 조정을 실시한 것이다.

2) 소득 재분배 효과

가. 평균 소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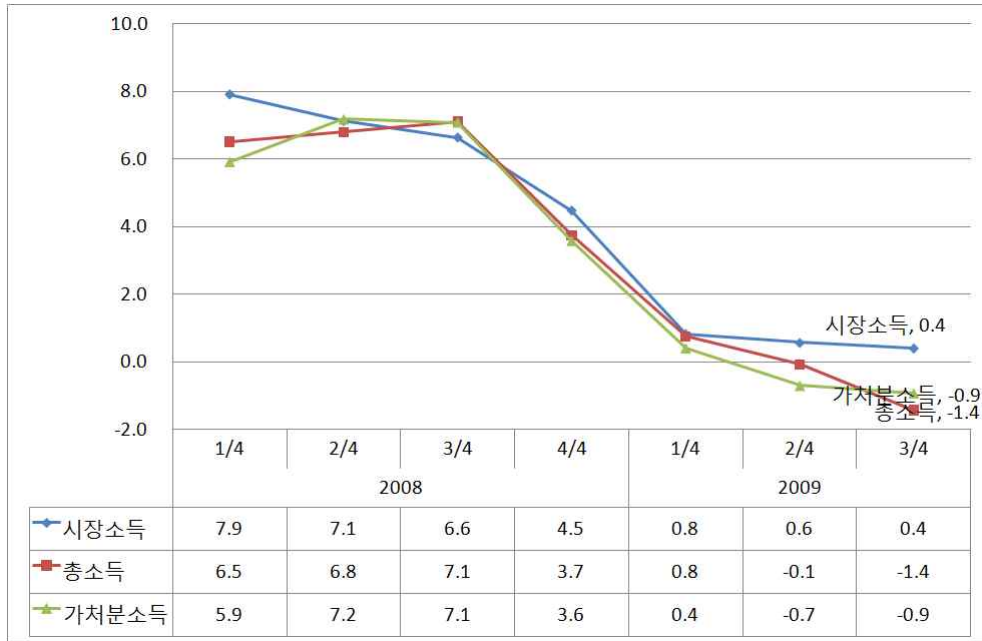
아래 그림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경상 시장소득과 총소득, 그리고 가처분소득의 평균값이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3분기 이후 실질소득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소득의 경우에는 이보다 앞서 경기가 고점을 통과한 2008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 2009년에는 가처분소득과 총소득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시장소득의 경우에도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

먼저 경상 시장소득의 감소를 보자. 시장소득의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재산소득의 감소였다. 재산소득은 2008년에 분기별 평균 -0.7%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3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21.8% 감소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도 2008년에 분기별 평균 8.3%에서 2009년에 1.0%로 증가율이 감소했고 사업소득은 1.9%에서 0.1%로 증가율이 감소했다.

다음으로 총소득의 증가율은 2008년 3분기를 제외하고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시장소득의 감소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비경상소득의 감소 때문이다. 비경상소득은 2008년 분기별 평균 -0.9%에서 2009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평균 -25.0% 감소율을 나타냄에 따라 이전소득이 시장소득보다 증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소득의 감소를 이끌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을 확인해 보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처분소득은 총소득으로부터 비소비지출 전체를 공제한 것을 의미한다. 엄밀한 정의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은 총소득에서 조세와 준조세, 그리고 이자비용만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지만 통계청의 분기별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이들 이외에 기타 비소비지출까지도 공제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타 비소비지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엄밀한 정의에 따른 가처분소득으로 보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은 2009년 2분기까지 총소득의 증가율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조세와 준조세, 이자비용 등이 총소득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을 강하게 의미하는 것이다. 즉, 앞서 살펴본 시장소득과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 등 각종 소득의 원천이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면서 조세와 준조세, 이자비용 등은 소득의 종속변수로서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실질소득 증가율 추이



주: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율.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KOSIS DB

나. 지니계수 개선도

이제 소득 재분배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소득 재분배 구조의 변화는 지니계수 개선도의 변화로부터 확인하기로 한다. 지니계수 개선도는 시장소득 지니계수로부터 특정소득 지니계수와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text{지니계수개선도 (\%)} = 100 \times \frac{G_{\text{시장소득}} - G_{\text{특정소득}}}{G_{\text{시장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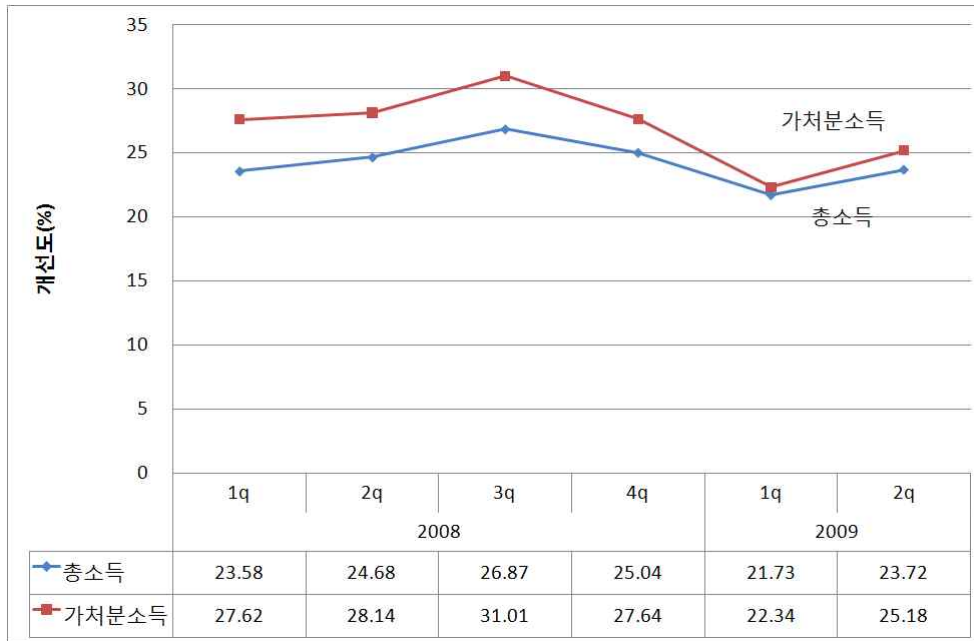
where, 민간소득 지니 $G_{\text{시장소득}}$, 특정소득 지니 $G_{\text{특정소득}}$

아래 그림은 총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개선도를 분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도가 총소득의 지니계수 개선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우리나라 소득 재분배 구조의 특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가처분소득이 총소득에 비해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낮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가처분소득과 총소득의 지니계수 개선도는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둘다 동일하게 2008년 1분기 이후 개선도가 높아졌다가 3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하였다. 다시 2009년 1분기에 저점을 찍은 후 2009년 2분기에는 전 분기에 비해 개선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지니계수 개선도의 변화 추이



주: 시장소득 지니를 기준으로 총소득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측정
 가처분소득 = 총소득 - 비소비지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위 그림에서 특징적인 점은 2009년 1,2분기의 지니계수 개선도가 가처분소득과 총소득 모두 전년 동분기에 비해 하락했다는 점이다. 총소득의 경우 2009년 1, 2분기의 지니계수 개선도는 각각 전년 동분기에 비해 -1.9%p, -1.0%p 하락했다. 가처분소득의 경우에는 지니계수 개선도의 하락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2009년 1, 2분기에 지니계수 개선도는 각각 22.34%와 25.18%를 기록해서 전년 동분기에 비해 각각 -5.3%p, -3.0%p나 하락하였다.

2009년 1,2분기에 총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도가 하락했다는 것은 각각 이전소득과 비소비지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하자. 아래의 표는 이전소득과 조세 및 사회보험의 분기별 지니계수의 변화이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는 이전소득을 더하고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수치만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전소득과 비소비지출 가운데 조세 및 사회보험의 지니계수를 확인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도의 변화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

표 4. 소득 재분배 요소들의 분기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

연도	분기	이전소득	(공제)조세	(공제)사회보험
2008	1q	-0.5031	0.6808	0.3123
	2q	-0.4875	0.5655	0.3283
	3q	-0.4891	0.4812	0.3089
	4q	-0.4703	0.5897	0.3068
2009	1q	-0.3528	0.5732	0.2910
	(증감)	(0.1503)	(-0.1077)	(-0.0213)
	2q	-0.4632	0.5305	0.3092
	(증감)	(0.0243)	(-0.0350)	(-0.0191)

주: 동등화 지수를 고려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위 표에서 2009년 1,2분기의 지니계수는 이전소득의 경우 각각 0.1503, 0.024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지니계수가 부(-)의 값을 가짐으로써 지니계수 개선, 곧 소득 재분배에 기여한다. 민간과 공적 이전소득이 하위분위 소득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분됨으로써-즉, 지니계수가 부의 값을 가짐으로써-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2009년 1,2분기의 지니계수가 전년 동분기에 비해 증가하였으므로 이전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2009년 1,2분기의 지니계수는 모두 전년 동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비소비지출 항목으로써 정(+)의 값을 가짐으로써 지니계수 개선, 곧 소득 재분배에 기여한다. 조세 부담률과 사회보험료를 상위분위 소득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시킴으로써-즉, 지니계수가 정의 값을 가짐으로써-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의미이다. 2009년 1,2분기의 지니계수는 전년 동분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므로 앞서 이전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 10분위 배율의 변화

시장소득과 총소득, 그리고 가처분소득의 10분위 배율을 통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아래는 동등화 소득 기준 10분위 배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먼저 동등화 시장소득은 2008년 1분기에 4,875.08배를 기록했으나 2009년 2분기에 344.90 배까지 경향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 시장소득의 소득불평

등은 2008년 같은 기간보다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총소득의 10분위 배율은 시장소득과는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2009년 상반기의 총소득 10분위 배율은 200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시장소득의 10분위 배율은 분석기간 가운데 가장 최근인 2009년 2분기가 가장 낮았으나 총소득의 10분위 배율은 2009년 2분기에 5.91 배를 기록해 2008년 3분기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즉, 총소득의 소득 불평등도는 2008년 하반기 이후 다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소득의 10분위 배율은 경향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9년 2분기의 가처분소득 10분위 배율은 5.99배로써 전년 동분기의 5.28배보다 높아졌다. 즉 가처분소득의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가처분소득의 10분위 배율은 2009년 상반기에 들어서 총소득의 10분위 배율을 능가하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이런 현상은 분석기간 중에 2009년 상반기에만 발견되는 현상이다. 2009년 상반기에는 총소득과 가처분소득 사이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조세와 준조세, 이자비용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 동등화 소득 기준 10분위 배율

연도	분기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2008	1q	4875.08	6.09	5.53
	2q	411.45	5.57	5.28
	3q	424.56	5.13	4.59
	4q	362.17	5.60	5.38
2009	1q	1298.08	5.92	5.95
	2q	344.90	5.91	5.99

주: 10분위 배율 = 시장소득 기준 최상위소득 10% 소득의 최하위소득 10% 소득의 비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계산

10분위 배율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앞서 지니계수 개선도에서 분석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니계수 개선도 분석에서 총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이전소득과 조세 등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10분위 배율에서는 특히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역시 가처분소득을 결정하는 이전소득과 조세의 변화 때문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6. 소득 분위별 조세 부담률의 변화

앞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도가 2009년 상반기 들어 하락했음을 확인하였다. 그 원인 가운데 조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의 감소에 대해 살펴보자. 가계동향조사에서 파악되는 조세는 직접세를 의미한다.⁵⁾ 가계의 소득 분위별 조세부담률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하자. 아래의 표는 10분위별 조세 부담률을 나타낸 것이다. 재분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계의 조세 부담은 동등화지수를 곱하여 사용했으므로 실제 조세 부담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표 6. 소득 분위별 조세 부담률의 변화 추이

	2008				2009	
	1q	2q	3q	4q	1q	2q
1분위	0.6	1.36	4.18	2.03	1.17	1.71
2분위	1.5	1.71	3.95	1.09	6.29	2.08
3분위	0.81	2.02	2.94	2.25	1.29	2.75
4분위	1.36	3.02	3.58	2.56	2.05	3.25
5분위	3.31	4.38	4.5	3.86	2.78	5.03
6분위	4.33	6.06	5.54	5.71	4.72	7.22
7분위	5.47	8.02	7.42	7.42	6.48	8.17
8분위	10.6	13.8	11.3	11.9	10.3	12.7
9분위	17.4	17.8	15.5	18	18.1	16.9
10분위	54.6	41.8	41.1	45.2	46.9	4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동등화 값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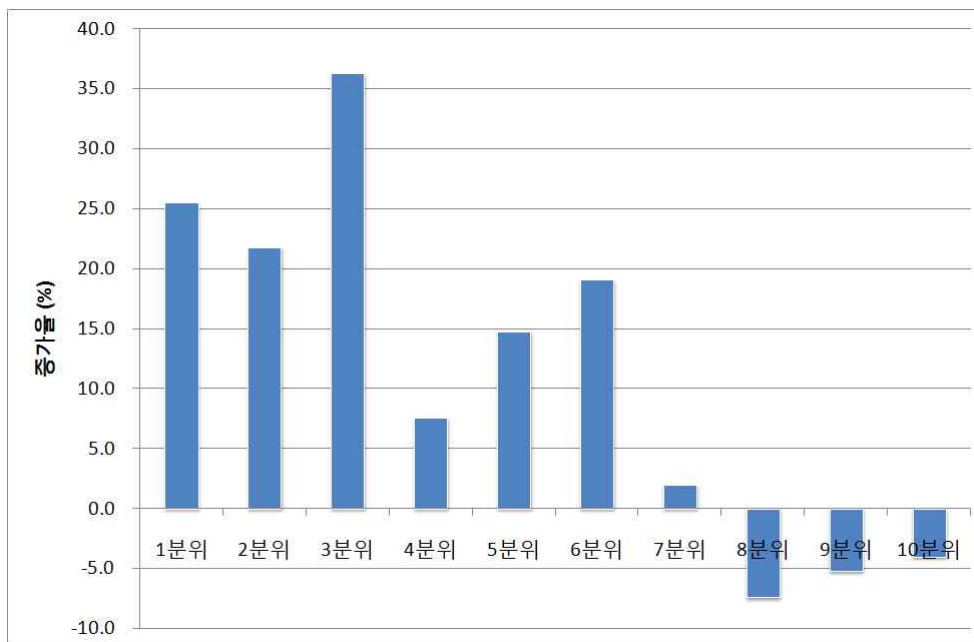
먼저 최상위 시장소득 분위인 10분위의 경우 추세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하락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0분위 가계는 2008년 1분기에 54.6%를 점했던 조세부담률이 2009년 2분기 현재 40.1%까지 하락했다. 9분위 가계 역시 하락 정도는 적지만 2009년 들어 다소 부담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분기에는 18.1%로 전년도보다 높은 부담률을 보였으나 2분기에 16.9%로 전분기 대비 1.2%p, 전년 동분기 대

5) 가계의 간접세 부담을 소득 분위별로 집계하는 조사는 현재 없다. 일반적으로 간접세의 소득 분위별 부담은 지출 각 항목에 대해 각각의 세율표를 참조하여 추정한다.

비 0.9%p 하락했기 때문이다. 8분위도 전년 동분기 대비 조세부담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분위 이상의 소득 분위가 조세 부담률이 하락한 것과는 달리 7분위 이하의 모든 하위 소득 계층의 조세 부담률은 증가하였다. 2009년 2분기를 기준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조세 부담률 증가율은 1분위 25.5%, 2분위 21.8%, 3분위 36.3%가 증가하였고 4~6분위의 조세 부담률 증가률도 각각 7.6%, 14.8%, 19.1%를 기록하였다. 7분위는 1.9%로 다소 조세부담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분위별 조세(직접세)부담률 증가율(2009년 2분기)



주: 전년 동분기 대비 조세부담률의 증가율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우리나라는 직접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직접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화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2008년 이후 추진된 감세 정책의 수혜가 8분위 이상의 상위 소득계층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3장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킬 것이 우려되었던 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감세 및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했으나 소

득 재분배의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감세 및 재정 지출의 확대는 주로 경기 하강기에 총수요 또는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정책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직접세에 집중됨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2008년 이후 2009년 2분기까지 가계동향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소득재분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이전소득과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정부의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가계의 소득재분배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먼저, 평균소득이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시장소득의 감소를 불러오고 연쇄적으로 총소득과 가처분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소득의 하락은 재산소득의 하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며 근로소득의 경우 실질소득 기준으로 2009년도에 1% 상승률 수준으로 하락해서 정체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에는 실질 총소득과 실질 가처분소득은 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시장소득의 증가가 정체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소득 재분배 효과가 하락한 때문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하락한 것은 지니계수 개선도에서 확인된다. 지니계수 개선도는 총소득과 가처분소득이 모두 2008년 3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도 하락 폭이 커서 가처분소득을 결정하는 조세 및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됨으로 인해 소득 분위별 조세 부담률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 들어 조세 부담률은 8분위 이상의 상위 소득 계층에서 하락했고 7분위 이하의 하위 소득 계층에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2분기 현재 시장소득의 10분위 배율은 동등화 소득 기준으로 345배에 달하고 있다. 각종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총소득과 가처분소득은 각각 5.91배와 5.99배로 10분위 배율을 기록해서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급격히 약화됨에 따라 총소득에 비해 가처분소득의 10분위 배율이 더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가계의 소득 재분배 현황 분석으로부터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첫째, 2009년 들어 소득 악화와 소득 불평등 악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가처분소득의 악화와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악화가 심각한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이는 이전소득과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재정지출에 있어서 공적 이전소득의 수혜집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함의하고 있다. 넷째,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 악화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감세 정책의 중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_국회예산정책처, 2009, 2009 통계로 보는 재정, 국회예산정책처, 서울
- _김기성 외(2004),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제1호
- _박승준, 2009, 재정책대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경제현안분석 제39호
- _성명재(2008), 조세재정지출이 소득분배 구조 및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_성명재, 박기백(2008),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 pp63~94
- _이영환, 신영임, 2009,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제41호

OECD, Statistics <http://www.oecd.org>

